

동아시아인 지역주의

정용화 · 박명림 · 손열 · 조영남 · 박인휘 · 전재성 · 김상배

동아시아인 지역주의

조판 인쇄 : 2006년 06월 01일

조판 발행 : 2006년 06월 08일

지은이 : 정용화 · 박명림 · 손열 · 조영남 · 박인휘 · 전재성 · 김상배

펴낸이 : 심재철

펴낸곳 : 미래인력연구원<주>지식마당

발행처 : 미래인력연구원(www.cfus.or.kr)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향금리 57번지

전화 : 3471-9381 팩스 : 3471-9384

편집·제작·공급 : 지식마당(kfpcom@naver.com)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60-6 감우빌딩 4층

전화 : 3471-9382 팩스 : 3471-9384

*지은이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ISBN 89-89790-34-4 93340



제8장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IT협력의 미래

김 상 배

I. 머리말

최근 들어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를 둘러싼 동아시아¹⁾ 지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IT라는 아이টেম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는 북한 핵문제나 각국 간 도서 분쟁 등과 같은 대결구도가 아직도 잔존해 있다. 경제 분야에는 APEC 등의 협의체가 작동하고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문화 분야에도 일본의 역사교과서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여전하다. 이에 비해 새롭게 부상하는 IT분야에는 아직 뚜렷한 이해갈등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협력의 요소들이 강

1) 보통 동아시아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또는 대만) 등이 속한 동북아시아와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속한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용례는 동아시아라고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한·중·일 3국의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소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도 동아시아는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었으며 동남아시아까지도 포함하는 동아시아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존된다. IT산업에는 한·중·일 간의 상호보완적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화적·언어적 유사성은 동아시아 정보문화권 형성의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러한 IT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지역갈등의 구도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역내성장을 도모하자는 소위 '동아시아 IT담론'이 부상하고 있다.

동아시아 IT담론은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을 속성으로 하는 IT분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국 단위의 개별 대응을 넘어서 다자적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주도의 IT패권에 단순한 편승을 거부하는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글로벌 IT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IT산업의 국내구조에서 비롯되는 유사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IT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견되는 미국의 제국적 행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항하는 방어적 담론의 등장을 부추겼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즉 윈텔(Wintel)로 대변되는 미국 IT기업들의 독점적 지배와 이를 옹호하는 지적재산권과 자유무역 국제체제의 형성은 동아시아 IT산업에서 대항담론의 싹을 틔우게 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IT담론은 단순한 방어적 담론을 넘어서 최근 변모하는 국가전략의 공세적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여기에는 중국의 부상을 계기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아시아 공간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발견되는 동아시아 IT담론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미국 중심의 해양세력을 중시하는 전략에서 중국을 위시한 대륙세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전략발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물질적 차원에서 크게 성장한 동아시아의 역량을 바탕으로 등장한 이러한 전략발상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후

지를 토대로 동아시아만의 독자적 표준설정에 성공할 경우 이는 세계적으로 막대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IT담론은 단순한 IT분야만의 담론이 아니라 최근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1세기 국가전략 담론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현재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구상만이 존재하며, 그나마 진행된 동아시아 IT협력도 아직 정부 간 협력구상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IT분야에서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대항담론을 현실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IT담론은 그 현실화를 저해하는 내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지는 않은가? 동아시아 IT협력이 지향하는 대항담론은 전략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인가?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에 성공하여 제도화를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IT질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짜일 것인가? 그리고 IT분야의 사례를 통해서 엿보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형성에 대응하는 21세기 '지식/네트워크 전략'은 어떻게 짜여야 할 것인가?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경쟁과 협력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적 협력의 당위성을 직접

2)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서울: 동아일보사, 2004). 한편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발견되는 21세기 국가전략에 대한 상이한 시각으로는 다음을 참조. 백낙청(외), 『21세기의 한반도 구상』(서울: 창비, 2004); 하영선(편),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서울: 풀빛, 2004).

3)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 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0(1), (2004) pp.167-194.

도출하는 피상적인 접근이 많았다.⁴⁾ 그러나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현실화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IT담론이 담고 서 있는 물질적 조건과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에 대한 좀더 냉철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IT산업의 물질적 조건에 비추어 동아시아의 IT담론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화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IT담론이 일시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좀더 진전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협력구상이나 제도적 틀에 대한 정비작업과 함께 현재 마련된 물질적 기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요컨대, 동아시아 IT담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IT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지식질서(knowledge order)'의 개념을 중

- 4) 여태까지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정책연구는 상당수가 이루어졌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분석연구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참고할만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일본연구논총』 제17집, (2003), pp.75-101;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 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국제정치논총』 45(1), (2005), pp.35-56; 김상배, "동북아 IT협력: 2020년 국가전략의 시각," 『한국의 국가전략 2020』 제13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2005); Ngai-Ling Sum,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Resistance and Adaptations in East Asia," *Critical Asian Studies*, 35(3), (2003), pp.373-398; Takuma Takahashi and Fujio Namiki, "Three Attempts at 'de-Wintelization': Japan's TRON Project, the US Government's Suits against Wintel, and the Entry of Java and Linux," *Research Policy*, 32(9), (October, 2003), pp.1589-1606
- 5) 이러한 이익-제도-관념의 분석틀은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 또는 '구성적 현실주의(constitutive realism)'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Anna Leander,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00), pp.184-196; Mark Blyth, *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전재성, "현실주의 국제제도론을 위한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34(2), (2000), pp.341-358.

심으로 동아시아 IT협력의 문제를 탐구하였다.⁶⁾ 지식질서란 지식(이 글에서는 주로 IT)⁷⁾의 생산·전파·소비를 둘러싸고 발견되는 능력의 분포, 제도의 형태, 공유된 관념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21세기 세계정치에서 지식질서의 변동에 대한 이해는 안보, 경제, 문화 영역의 세계질서 또는 지역질서 전반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은 주로 지식질서가 경제질서(특히 생산질서) 또는 부분적으로 문화질서와 중첩되는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IT산업의 지식질서에 초점을 맞추었다.⁸⁾ IT산업의 지식질서 개념을 원용하여 이 글이 밝혀보고자

- 6) 지식질서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별로 없다.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또는 성찰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진영이 지식변수가 국제정치에서 갖는 의미를 소홀히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참고할만한 연구로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의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 E. 하아스(Ernst B. Haas)의 지식과 국제기구, 러기(John Ruggie)의 다자주의, 셀(Susan Sell)의 지식과 국제레짐, P. 하아스(Peter M. Haas)의 인식공동체, 갈통(Johan Galtung)의 커뮤니케이션 제국주의 등의 개념을 들 수 있다.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94); Ernst B. Haas, *When Knowledge is Power: Three Models of Chang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erard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3-47; Susan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eter M. Haas, (ed.), *Knowledge, Power,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7);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 (1971).
- 7)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파악되는 지식(특히 기술)과 세계정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3(4), (2003, 겨울) pp.33-58;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2004, 가을), pp.255-276; 김상배,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식(技識): 정보혁명의 국제정치학적 탐구를 위한 개념적 기초," 『국제정치논총』 45(1), (2005, 봄) pp.57-82.
- 8) 이 글이 설정한 주제의 범위 내에서는 안보질서와 지식질서가 중첩되는

하는 것은 행위자 차원에서 제기되는 '대항담론'과 구조 차원에서 발견되는 지식의 권력구조, 즉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⁹⁾가 보여주는 긴장관계이다. 이러한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IT분야의 제도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관심사이다.

이 글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출현한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항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IT담론의 출현을 검토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IT담론이 제기하는 논의의 근거와 내용을 IT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현실화 가능성을 IT산업을 둘러싸고 형성된 지식구조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글로벌 지식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IT패권과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분석적으로 밝혀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IT담론의 제도화 가능성을 각국의 국내 차원과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각국이 추구하고 있는 제도모델의 기본성격과 그 한계를 지적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에 대해서 견해를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적 과제를 짚어 보았다.

부분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IT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변수로 작동하는 바세나르 협약의 존재가 그것이다.

9) 이 글에서 원용하는 지식구조는 스트레인지의 개념에 따랐다. S. Strange, *States and Markets*,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II. 동아시아 IT협력의 대항담론

1.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배경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은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국가의 선도적인 역할, 국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안정, 국민들의 높은 성취의욕과 노동윤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열,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식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미국과 서구의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우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에 동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인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다. 원래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이제 오히려 동아시아의 좌절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신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형 자유시장모델과 미국적 가치가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집중 거론되었다. 동아시아 국가의 국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논하는 데 제시되는 기준은 개인과 조직의 능력과 경쟁력, 효율성을 시장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식 제도와 가치들이었다.¹⁰⁾

그렇다면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는 과연 그 적실성을 상실하였는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

10) 소위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정치학적 시각의 개괄적 소개로는 다음을 참조.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김대중(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pp.183-242. 한편,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계라는 시각으로 일본의 컴퓨터 산업에서 진행되었던 구조조정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Sangbae Kim, "Hardware Institutions for Software Technologies: The Japanese Model of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Personal Computer Industry,"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9(1), (June, 2002), pp.17-36.

아직 가치의 효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대안은 미국식 경제체제와 가치관을 수용하는 길뿐인가? 역설적인 것이 1997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방어적이고 저항적인 담론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경제지구화가 국가·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국가·지역경제의 취약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역 수준의 경제적 상호협력력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다시금 공세적인 모습으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최근 IT분야에서 동아시아 기업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정보화시대에 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생명력을 예견케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론은 그 생성과 부활의 과정에서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항하는 지역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이 하나의 큰 연계를 갖고 대응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이 갖고 있는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다. 19세기 말 서구적 근대의 동아시아 전파 과정에서 '동양'이라는 관념이 형성되었듯이, 20세기 후반 이래의 지구화와 정보화는 동아시아 공간의 대응전략을 동질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부활시킴으로써 역내 상호작용의 제도화를 증진시키고 '문명으로서의 동아시아' 관념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라는 공통의 경험은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추구케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¹¹⁾

2. 동아시아 IT담론의 내용

동아시아에서 한·중·일 3국간 IT협력의 틀 마련에 대한 합의는 1999년 11월 아세안(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2000년 11월의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제안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합의되었던 'IT협력 이니셔티브'를 한·중·일 3국으로 확대하고, IT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정부 부처의 국장급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 이후 2차례의 국장급 전문가회의와 3차례의 한·중·일 IT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초기의 동아시아 정보문화권을 위한 추상적인 IT협력단계에서 벗어나 점차 구체적인 IT분야의 협력으로 이행하여, 현재 차세대 이동통신, 차세대 인터넷, 공개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의 정부, 민간 기업,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IT협력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04년 7월 열린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한·중·일 IT장관회의를 상설협의체인 한·중·일 IT정상회의로 격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아시아 IT협력의 제도화 및 공동체 구축의 기반을 확보하였다.¹²⁾

이러한 IT협력의 구상과 실천이 현실적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IT의 생산과 수요 차원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표 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의 생산규모 면에서 보면, 미국의 생산규모가 2000년의 28.1%에서 2003년에는 24.7%로 감소될 것이 전망된 반면, 한·중·일 3국 IT

11)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 담론과 제도협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장인성, "지구화·정보화시대 동북아 국제사회의 균열과 협력: 동북아 국제사회화와 문명에 관한 성찰," 『한국과 국제정치』 20(4), (2004, 겨울), pp.107-136; 야마무로 신이찌(山室信一), 「여럿이서 하나인 아시아」(서울: 창비, 2003), pp.182-184.

12)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p.78-80.

생산 규모의 합계는 2000년의 29.4%에서 2003년의 34.0%로 증대될 것이 전망되었다. 이는 특히 중국의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만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IT생산 규모까지 합치면 넓은 의미에서 본 동아시아 국가들의 IT생산 규모는 2003년에는 46.3%에 달해 미국의 24.7%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8-1> IT기기 생산규모별 국가순위

단위: 금액(\$M), 비중(%)

연도	2000		2001		2002		2003	
1위	미국	314,499 (28.1)	미국	250,781 (27.7)	미국	220,048 (25.4)	미국	226,448 (24.7)
2위	일본	204,146 (18.2)	일본	163,695 (18.1)	일본	144,141 (16.7)	일본	149,946 (16.4)
3위	한국	67,611 (6.0)	중국	73,293 (8.1)	중국	84,192 (9.7)	중국	101,609 (11.1)
4위	중국	58,620 (5.2)	한국	48,041 (5.3)	한국	53,996 (6.2)	한국	59,886 (6.5)
5위	말레이시아	54,150 (4.8)	대만	37,957 (4.2)	대만	42,652 (4.9)	대만	47,473 (5.2)
6위	대만	50,271 (4.5)	영국	36,707 (4.1)	싱가포르	33,976 (3.9)	싱가포르	36,205 (3.9)
7위	싱가포르	45,187 (4.0)	독일	32,951 (3.6)	영국	33,861 (3.9)	영국	33,355 (3.6)
8위	영국	42,370 (3.8)	싱가포르	32,785 (3.6)	독일	29,463 (3.4)	독일	29,846 (3.3)
9위	독일	36,476 (3.3)	말레이시아	29,011 (3.2)	말레이시아	28,105 (3.3)	말레이시아	29,485 (3.2)
10위	프랑스	27,825 (2.5)	프랑스	25,091 (2.8)	프랑스	22,738 (2.6)	프랑스	23,173 (2.5)
전체	1,119,628 (100)		903,849 (100)		864,679 (100)		916,798 (100)	

출처: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3)

* 2002-2003년은 전망의 추정치

<표 8-2> 동아시아 IT시장의 현황 및 전망

단위: 금액(\$M), 비중(%)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성장률
한국	12,119.8 (1.3)	12,952.8	13,866.1	15,009.1	16,298.8	17,693.0 (1.4)	8.1
일본	94,678.5 (10.4)	97,419.8	100,518.2	103,009.5	106,251.3	109,533.4 (8.9)	3.0
중국	27,050.3 (3.0)	31,088.5	35,345.2	40,378.0	45,551.3	51,456.7 (4.2)	13.4
3국	133,848.6 (14.6)	141,461.1	149,729.5	158,396.6	168,101.4	178,683.1 (14.4)	6.0
세계	915,119.6 (100)	962,947.4	1,023,620.0	1,089,990.2	1,161,053.2	1,237,479.5 (100)	6.5

출처: IDC, (2004. 7.)

* 중국은 홍콩포함; 2004년부터는 전망 추정치.

한편 IT의 시장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IT시장에서 차지하는 한·중·일 IT시장의 절대적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표 8-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중·일 3국의 2003년 IT시장 규모는 1,338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한·중·일 IT시장 규모는 1,787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14.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러한 수치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의 IT시장 규모가 2003년에는 270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13.4%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2008년에는 516억 달러로 세계 IT시장의 4.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¹³⁾

이러한 한·중·일 3국의 IT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국과 유럽 중심의 기존 IT시장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은 IT산업 분야에서

13)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중·일 3국의 절대치가 증가되었다기보다는 중국이 일본의 IT시장을 잠식하는 형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전망을 앞당길 태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 한국의 중간기술과 테스트베드 환경, 중국의 로우테크와 노동력 및 거대한 시장잠재력 등과 같은 요인들은 한·중·일 3국이 상호보완적인 비교우위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우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IT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이러한 비교우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IT협력을 통해 증대되는 이익이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 및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상회한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일반적 전망을 넘어서 동아시아 IT협력의 대항담론은 동아시아 독자표준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표 8-1>과 <표 8-2>가 의미하는 바는 한·중·일 IT시장이 생산과 수요의 양 측면 모두에서 세계표준의 배후지로서의 물리적 조건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네트워크 외부성이 작동하는 IT분야에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존재는 표준경쟁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3국간 IT협력의 의제도 차세대 인터넷과 이동통신, 공개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표준화 관련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을 세계 IT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하에 3국간 IT정책, 기술, 표준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상설협의체의 구성도 진전되고 있다. 3국의 표준화 관련 협력은 구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표준화 국제협상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구미의 세계표준과 핵심기술 개발에 밀려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구미 주도의 글로벌 질서에 도전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14)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p.89-90.

특히 최근 진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 문제이다. 한·중·일 IT협력은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의 표준화 등에 있어 한·중·일 3국이 세계표준을 주도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중심축이 유럽과 미국에서 동아시아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이동통신 사용자 인구는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3국이 선택한 표준이 세계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에서 3국이 통신방식을 표준화한다면 통신회사나 단말기 메이커의 비즈니스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표준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차세대 인터넷 분야에서 광대역통합망(BcN)이나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들의 표준화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¹⁵⁾ 차세대 이동통신과 차세대 인터넷 분야의 표준경쟁은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표준경쟁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의 미래와 관련하여 2004년 7월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에서 전자태그(RFID)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이 합의된 바 있다. 또한 한·중·일 등 3국이 공동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RFID 네트워크 구축에도 착수하였다.¹⁶⁾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꽃은 단연코 컴퓨터 운영체제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Linux)의 반(反) 윈텔 담론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에 대항하여 등장한 대안적 운영체제로서의 리눅스의 공동 기술개발을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들어 기존에는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리눅스에 대한 지원정책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최근의 사례는 2004년 4월 3일 중국의 베이징, 7월 27일 일본의 삿포로, 12월 2일의 한국의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15) 『전자신문』(2005.3.31).

16) 『전자신문』(2005.6.21).

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공개 소프트웨어 포럼’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관계부처 국장급을 대표로 하여 벌이고 있는 협의체인데 동아시아를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술개발 테스트,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 등의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협력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동아시아에서 리눅스와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담론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아시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 차원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¹⁷⁾

이 밖에도 콘텐츠산업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동아시아 표준의 수립도 거론되고 있다. 영어 중심 콘텐츠의 획일화 경향에 대응하고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를 포함하는 다국어로 문화 및 영상 콘텐츠 제공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는 의미 있는 협력 의제이다. IT산업 분야에서 한자코드 컴퓨터처리 등에 대한 동아시아 3국 협력 추진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한자문화권의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의 한자 검색과 국제 한자 정보 DB구축의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를 반영하는 각종 인터넷 콘텐츠의 공동개발의 문제도 협의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을 살리는 다국어 인터넷 도메인 이름체계의 마련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보화 시대의 언어지역주의 또는 언어문화권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적 표준의 사안이다.¹⁸⁾

17) 김상배,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경쟁의 세계정치: 리눅스(Linux)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2005, 봄), pp.365-387.

18) 정보화시대의 언어민족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pp.409-429

그런데 이러한 동아시아 IT담론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동아시아 지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장밋빛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IT분야의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확산(spill over)되어 지역 연대의 틀이 수립될 가능성도 있지만, 정반대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의 구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주의적인 협력과 공동체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주의적 경쟁의 이미지가 진하게 깔려 있다. 다시 말해, IT협력의 비전은 수사적 차원에서 제시되고 내심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상주의적 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IT분야의 발전이 동아시아에서 균열의 현실과 협력의 이상에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에 대해 냉철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항담론을 현실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여야 한다. 좀더 원론적으로 IT분야에서 한·중·일이 왜 협력해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왜 반드시 한·중·일이라는 공간구조로 대항해야 하는지도 재고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IT담론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관념의 차원을 넘어서 다자주의적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19)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과 같은 지역통합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이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An Overview,”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1-19; 최진우, “지역통합의 국제정치이론,” 우철구·박건영(편), 『현대 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2004), pp.257-290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에 결집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IT산업의 역량이 아직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IT산업 내의 권력구조를 보더라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III. IT산업의 지식구조와 동아시아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와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적으로도 힘이 뒷받침되어 글로벌 IT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직·간접적 견제로 인해서 좌절하여 글로벌 지식구조의 하위구조로서의 위상에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냐의 문제이다.²⁰⁾ 다른 하나는 만약에 부분적으로 대항담론의 도전이 성공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권력구조가 형성될 경우, 한·중·일의 역관계는 어떻게 구현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망이 현재의 동아시아 IT협력의 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담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모습이 글로벌 패권으로서의 미국을 참여시키는 개방형 모델일 것이냐, 아니면 동아시아 지역패권국(특히 중국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형 모델일 것이냐의 문제이다.²¹⁾

20) 이러한 문제제기에 입각한 동아시아 IT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참조 Sum, "Informational Capitalism and U.S. Economic Hegemony."

21) 이러한 동아시아 지식질서의 아키텍처 문제는 글로벌 생산질서에서 보이는 논쟁과 매우 유사하다. 즉 동아시아 지역패권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형 생산질서와 글로벌 패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초국적 생산네트워크(cross-national production networks, CPNs) 형태의 개방형 동아시아 질서의

1.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와의 관계에서 본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 문제이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는 동아시아 IT협력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IT패권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대항을 전제로 한 것이 많다. 특히 리눅스 분야의 한·중·일 협력이나 유비쿼터스 분야의 경쟁과 협력의 양상, 비디오 및 온라인 게임 산업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국제경쟁력 등은 해당 분야에서의 미국의 주도에 도전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현재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패권이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설부른 제기는 미국의 패권적 견제를 차츰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IT담론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지식패권 현황을 지식질서의 세 층위, 즉 지식 인프라, 지식 자원, 지식규범에서 살펴보자.

첫째, 지식 인프라 층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초고속 인터넷망의 연결에 있어서 대륙 간의 격차 혹은 서구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연구망의 대륙 간 연결 현황을 보면, 동아시아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북미와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 현재 아태지역과 북미 지역은 60Gbps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약 100Gbps급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

경쟁 문제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생산질서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Mitchell Bernard and John Ravenhill,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2), (January, 1995), pp.171-209; Walter Hatch and Kozo Yamamura, *Asia in Japan's Embrace: Building a Regional Production Alli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Michael Borras, Dieter Ernst, and Stephan Haggard, (ed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sia: Rivalry or Ric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김주훈,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한국의 혁신정책 방향: IT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4-03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3).

는 북미와 유럽 지역의 국제연구망 용량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40Gbps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되어 있고, 동남아 국가인 태국과 10Gbps급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중국은 미국·러시아·중국·한국을 잇는 10Gbps급의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망인 글로리아드(GLORIAD)로 연결 예정이다. 대만은 4.5Gbps급 이상으로 북미와 연결하여 북미·유럽과 기가급으로 연동할 계획이다. 요컨대, 아태 지역과 북미 및 유럽 지역으로의 연결은 주로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대용량의 국제연구망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북미와 유럽을 허브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식 자원 총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기술경쟁력 면에서 미국이 크게 앞서고 일본과 한국이 쫓고 있으며, 중국은 상당히 뒤져 있는 형국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최근 발간된 한 자료에 의하면, IT분야의 절대 기술력 수준(1996-2000)을 수치로 환산할 때 미국이 16,730, 일본이 5,074, 한국이 405 등으로 나타난다고 한다.²²⁾ 상당한 격차가 아닐 수 없다. 지식 자원의 총위에서 보다 더 중요하게는 미국은 IT산업 분야의 표준설정을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투자비용 대비 위험도가 높거나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들은 끊임없이 아웃소싱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발전경로, 시장예측 등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기술비전을 만들어 내고 이에 근거하여 칩의 스펙을 규정하고 스탠더드를 설정함으로써 최고 부가가치 부문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설계기술이 경쟁력의 관건인데, 현재 활동 중인 천여 개의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기업 가운데 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2)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IT산업경쟁력 국제비교: OECD국가중심으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56%, 대만기업 15%, 유럽기업 1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수보다 설계기업의 기술력을 고려한다면 미국 기업의 영향력은 훨씬 클 것으로 짐작된다.²³⁾

또 다른 미국의 표준패권 사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윈텔제국(Wintel empire)에서 발견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의 두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윈텔은 PC 아키텍처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두 기업의 구조적 지배력을 빚대어서 붙여진 용어이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 이래 윈텔표준 또는 IBM호환표준은 PC아키텍처의 사실상(*de facto*) 표준을 주도하면서 세계 PC업계에서 제국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러한 윈텔의 패권은 최근까지도 확대·재생산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아시아 3국의 공개 소프트웨어 공동 표준추진에 대해서도 견제의 제스처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표준설정의 파워는 문화콘텐츠 산업에도 확산된다. 정보화시대 미국의 문화제국적 지위를 표현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실리우드(Silivood)라는 말이 있다.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와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성해서 만든 말이다. 이러한 실리우드의 등장은 기술의 우위가 문화의 지배로 전환되는 정보화시대 지식구조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²⁴⁾ 최근 들어 미국은 IT표준의 핵심 부문에서의 패권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 시대 다른 분야의 표준에 대한 통제도 노리고 있다.

끝으로, 지식 규범 총위를 살펴보면, 미국의 지식패권은 글로벌 차원의 제도화 또는 규범화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가 IT분야의 대항담론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경우 정부 간 관계 차원에서도 글로벌 패권으로부터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견제로는

23) 배영자, “초국적 반도체 생산네트워크와 동북아 경제협력,” pp.35-56.

24)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문화제국: 실리우드(Silivood)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5).

동아시아 지역의 독자표준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미·일 반도체 분쟁이나 일본의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을 이루는 트론(TRON)의 사례로 미루어 보건대 미국은 WTO의 국제레짐에 의거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²⁵⁾ 최근 들어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쉘컴이 최근 휴대인터넷·무선인터넷 플랫폼의 한국산 단일표준에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04년 4월 7일 '2004년 외국의 통신 분야 통상협정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규격(WIFI) 의무화 및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 단일 표준화 방침이 미국 통신업계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해 '주요 우려 대상국'으로 지목한 바 있다.²⁶⁾

2. 동아시아 IT산업의 지식구조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 문제는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IT산업 자체의 지식구조의 맥락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글로벌 지식구조의 제약 속에서 발생하는 동아시아 IT산업 패권의 변동 가능성이 동아시아 IT담론의 미래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인 관심사는 만약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패권에 대한 대항전선을 형성한다면 그 실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IT질서에서 현재 누가 패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패권변동이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와

25) 김상배,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pp.111-130; 김상배, "트론(TRON)의 세계정치경제: 일본형 컴퓨터표준의 좌절과 유비쿼터스 담론의 기원," 『국제정치논총』 44(3), (2004, 가을) pp.101-123.

26) 『동아일보』(2004.4.8).

더 나아가 제도화에 주는 전망은 무엇인가의 문제도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을 탐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는 거대한 배후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한국을 추격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중심이 일본 주도로부터 중국 주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지, 단적으로 말해 미래 동아시아의 지역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먼저, 지식 인프라 층위에서 볼 때 최근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차원의 지식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미 중심의 지식 인프라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이 상정하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기 보다는 각기 단편적인 발상에 의거해서 출현하였으며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허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제연구망의 대규모, 대용량, 글로벌화의 추세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연구망 백본이 요구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및 과학연구의 공동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ABP)' 프로그램을 UN에 제안하여 협의 중이며, 한국은 '동북아 IT허브론'을 제기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IT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APEC, ASEM 등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 사업으로 국제연구망인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테스트베드와 TEIN(Trans-Eurasian Information Network)을 제안하여 현재까지 확대 발전시켜 왔으나, 독자적으로 대규모, 대용량, 글로벌 국제연구망을 구축하기가 예산 및 인력 면에서 역부족이다.

각국별 IT인프라 보급이나 IT활용도를 보면 한·중·일 3국간에는 지식 인프라의 면에서 상당한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한국은 IT인프라의 보급 면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 <표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호스트 수를 제외하면 PC 및 이동통신의 보급

물, 인터넷 속도·비용, 인터넷 사용 수 등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15개로 중국의 0.1개보다 많지만 일본의 56개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26.5% 수준에 불과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인터넷 환경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인터넷 속도·비용을 비교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저렴한 접속 비용 등으로 일본과 중국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표 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접근성, 전자상거래 활용도, 전자정부 달성도,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이 조사 대상 75개국들 중 7~21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 일본은 IT활용 측면에서 22~31위의 중위권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44~62위의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의 경우는 7위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²⁷⁾

<표 8-3> 한·중·일 IT인프라 비교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

항목	한국	일본	중국
PC	145.2	100.0	5.0
이동통신	109.7	100.0	25.8
인터넷 호스트	26.5	100.0	0.1
인터넷 속도·비용	247.4	100.0	81.0
인터넷 사용자	122.9	100.0	10.2

출처: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3. 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2)

27) 이대웅, "동북아 소프트웨어 산업과 협력 가능성," 한국동북아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500-501.

<표 8-4> 한·중·일 IT활용도 비교: 75개국 중 순위
(2001~2002년 기준)

항목	한국	일본	중국
전자상거래 활용도	15	22	46
전자정부 달성도	18	31	44
네트워크화 구축 정도	21	22	48
인터넷 접근성	7	26	62

출처: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3. 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2).

<표 8-5> 한·중·일 IT 기술경쟁력 격차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값)

구분	일본			중국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설계기술	116.2	108.6	106.3	80.6	77.5	70.7
기술·제품 개발력	109.4	106.8	112.0	81.0	75.0	72.0
생산기술	104.6	100.0	101.0	86.0	77.0	78.3
품질수준	111.0	104.0	104.0	83.4	81.5	75.0
현재종합	110.3	104.9	105.8	82.8	77.8	74.0
기술격차	+1.3	+0.8	+1.7	-2.3	-3.8	-2.5
2010년 예측	102.2	94.4	102.1	95.2	95.5	88.3

출처: 한국산업은행, 『한·중·일 주요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KDB 테크노 리포트31(2004. 6.)

한편 지식자원 총위에서 보면, <표 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한·중·일 간 IT기술경쟁력의 경우 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 등 IT분야의 설계기술, 기술·제품개발력, 생산기술, 품질 수준 등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2~3년 정도 앞서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1~2년 정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일본은 앞선 기초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IT시장을 선도하고, 중국이

빠른 IT시장의 성장과 적극적인 기술주도정책 등으로 추격할 경우 한국의 IT기술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기술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외국기업이 지배하던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이 1998년에 2%에서 2003년 5월에 51.5%로 높아졌다. 또한 2010년에 이르면 IT기술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요컨대, IT분야에서 한·중·일 간의 기술격차가 좁혀지면서 지식구조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크게 앞서고 다른 국가가 단계적으로 따라가면서, 기술이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이전되는 소위 안행형(雁行型) 패턴을 보였다고 한다면, IT산업에서는 한·중·일 간의 IT기술수준은 분야별로 격차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은 각 세부 분야별로 각개 약진 방식으로 구미의 선진기술 도입과 토착화를 통해 격차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IT협력이 기존의 산업협력 패턴과 다르다는 점은 3국의 IT협력의 제도화에 있어 제약 또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전통적 산업발전 패턴의 '정형성'이 3국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IT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패턴의 가능성은 협력의 '위계성'을 탈색시킨다는 점에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한·중·일 3국간의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IT협력의 전망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3국이 추구하는 IT협력의 방향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의 거대시장, 일본의 기술력, 한

28)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90.

국의 테스트베드 환경 간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구미 시장에서의 협상력 강화라는 당초 협력의 전제조건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변할 경우 한·중·일 IT산업의 비교우위구조는 협력보다는 경쟁의 방향으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기술표준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중·일은 표준설정을 통해서 미국 주도의 세계표준에 대항하려는 시도 중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표준을 동아시아 표준으로 만들려는 경쟁도 심하다.²⁹⁾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나치게 상호 견제하거나 경쟁할 경우 동아시아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력과 경쟁을 적절한 형태로 묶어내는 제도적인 틀 마련이 시급하다.

IV.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

IT분야의 협력을 위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국내제도를 어떻게 짤 것이며,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결국 이러한 제도화의 문제는 동아시아 IT협력에 임하는 행위자인 각국 차원에서 발견되는 국내적 제도역량을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IT산업의 제도 표준을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IT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에 임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이나 국내적 제도들을 보면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동아시아형 산업모델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이러

29) 중국의 표준경쟁 사례로는 다음을 참조. Ajit Kambil, Paul Lee, and Victor Long, "Changing China: Will China's Technology Standards Reshape Your Industry?"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Report* (Deloitte, 2004).

한 특징은 IT전략을 입안·수행하는 한국·일본·중국의 미래구상과 정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1. 한·중·일의 IT정책과 그 성격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자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IT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부터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IT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앞서 2000년에 범정부 차원의 'IT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하였다. 2001년 e-Japan 전략 수행 이래, 일본 정부는 초고속인터넷(ADSL)의 급격한 보급 등 인프라 면에서 상당 정도의 진전을 이루었고, 인터넷 이용환경의 정비,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관련 법제정비 등 IT기반의 정비라는 성과도 달성하였다. 그 후 일본 정부는 2004년 e-Japan II 전략을 통해서 정보가전 등 일본의 강점을 살린 일본 독자 전략의 필요성이나 안전성·신뢰성의 문제나 아시아 지역을 고려하는 국제적 전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 정부는 u-Japan 실현을 위해서 수요자의 요구에 기반을 둔 과제의 해결, IT산업의 활성화에 의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의 기반구축 및 장애와 불안 해소 등 세 가지 기본골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³⁰⁾

일본 정부의 IT 관련 국제협력은 2003년 이후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수행하여 아시아지역의 역할 및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침체로부터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IT 국제협력·협조의 대상 분야는 국제기구에서의 다자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규범 책정, 정책·제도면의 협조, 국제적인 IT의 보급(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

에 대한 관심은 ODA차원의 협조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중·일 IT협력을 명시적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³¹⁾ 그 중에서도 주목할 것은 일본의 제안한 아시아 브로드밴드 플랫폼(ABP) 계획이다. 일본은 2003년 3월에 아시아지역의 브로드밴드 플랫폼 접근, 역내 국가 간 광대역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직접 연결, IPv6망으로의 용이한 진화, 아시아지역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와 브로드밴드를 활용한 전송, 주요 언어 간 번역기술 개발활용, 지역 연구자의 육성 등을 담은 ABP계획을 발표하면서 2005년까지 1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ABP계획은 일본이 풍부한 자금과 우수한 기술을 앞세워 이 지역의 브로드밴드 패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³²⁾

한국은 동아시아 3국 중에서 가장 먼저 IT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육성에 매진해 왔다. 1994년 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면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통신·방송·IT산업 관련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여 정보통신 수요정책(지식정보화·통신방송사업)과 공급정책(IT산업·R&D)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이와 아울러 1990년대 중반부터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어 왔다. 1996년에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제2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해당하는 'Cyber Korea 21'(1999)의 추진을 통해 IMF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e-Korea Vision 2006'(2002)이 수립되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정보화 전략과 비전을 안고 추진하였다. 최근 새 국가경영 전략으로 제안된 'u-Korea' 구상은 오

30) IT戦略本部, "e-Japan戦略," (2001); IT戦略本部, "e-Japan戦略II," (2003); IT戦略本部, "e-Japan戦略II 加速化パッケージ," (2004).

31) 外務省, "IT(情報通信技術)に関する国際協力・協調," (2001).

32) 나항렬, "일본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분석," 『정보통신정책』 15(8), (2003), pp.20-41.

는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해 세계적인 IT허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부는 IT분야의 산업정책으로서 소위 IT839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³³⁾

한국의 IT협력 구상은 명백하게 동아시아 IT협력 강화와 이동통신의 해외 진출(특히 중국 진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동아시아 IT협력 구상의 기원은, 2001년 3월 기초 작업을 시작한 이래 2002년 4월 17일 확정된 'e-Korea Vision 2006'에서 찾을 수 있다.³⁴⁾ 'e-Korea 2006'이 지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라는 제목 하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IT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후 정보통신부는 국제협력분야에서 IT수출 촉진 및 IT리더 국가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특히, 중국을 중심으로)을 전개하고 있으며, 'IT산업 해외진출추진위원회' 구성하고 'IT산업 해외진출 종합대책(2002~2006)'을 수립함으로써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업무를 전담할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 및 중국 내 CDMA 확산을 위한 '중국CDMA확산지원단'의 운영 등은 한국 정부의 IT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³⁵⁾

중국은 1953~1957년간 제1차 5개년계획(1.5계획)을 시작하여 현재 2001~2005년간 제10차 5개년계획(10.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의 WTO가입을 계기로 10.5계획 기간 중 대외개방을 가속화하고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위해 PC 및 통신망의

보급 확대, 정보자원의 개발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국가 초고속광역망의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장비 및 슈퍼컴퓨터 등 IT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10.5계획 종료연도에는 IT사업 규모를 2000년의 2배로 확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IT산업을 중국의 최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³⁶⁾ 이와 같은 중장기 계획과 병행하여 중국은 다양한 과학기술발전 프로그램들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986년 3월부터 추진해온 국가첨단기술연구개발계획인 '863계획'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83년 미국이 전략방어계획(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1984년부터 스타워즈계획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여 1986년 3월 해외 첨단기술 추적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중국의 863계획은 중·장기적 경제성장과 국가안전에 관련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독자적으로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³⁷⁾

중국의 IT 산업육성 및 대외산업협력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무역과 기술의 결합'으로 요약된다. 이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의 대가로 일정한 수준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IT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의 이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구미 기업들이 교부가 가치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인해서, 토착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미비한 인프라와 높은 통신비용, 전통적 거래관행·문화와 인터넷 비즈니스의 괴리, 지역 간의 심각한 정보격차,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치적 제약 등은 IT산업의 성장과 협력의 효과를 의문케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33) 김상배,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 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성남: 세종연구소, 2002), pp.143-163.

34) 정보통신부,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2002).

35)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97.

36)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한국동북아 지식연대(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487-488.

37) Evan A. Feigenbaum, "Who's Behind China's High-Technology 'Revolution'?" *International Security*, 24(1), (1999), pp.95-126.

다. 중국은 이러한 산업협력 기초 하에 현 단계에서는 IT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의 정보화와 IT산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실질적 협조를 얻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화와 정보화의 축약된 비전을 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현재 본격적인 동아시아 IT협력의 비전은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³⁸⁾

이상에서 개괄한 한·중·일 IT정책의 기본성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유사점이 발견된다.³⁹⁾ 첫째, 한·중·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의 구상은 19세기 이래 지속되어 온 근대 국민국가 모델에 입각하여 물질적 권력 자원을 강조하는 부국강병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⁴⁰⁾ 다만 21세기 판(版) 부국강병 담론은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IT담론은 e-Japan, e-Korea, 863계획 등과 같은 IT강국론 또는 과학기술입국론이 국제적 세팅에 놓이면서 생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IT담론이 상정하고 있는 IT는 다분히 기술·경제·산업 중심

38) 김용희, “동북아 IT협력의 정치경제,” pp.93-94. 이 밖에 IT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Zixiang Alex Tan, “Product Cycle Theor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Foreign Direct Investment, Government Policy, and Indigenous Manufacturing in China.” *Telecommunications Policy*, 26(1/2), (February/March, 2002), pp.17-30; 이은민, “중국 IT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14(23), (2002), pp.1-20.

39) 김상배, “동북아 IT협력: 2020년 국가전략의 시작.”

40) 부국강병 담론의 역사적 맥락을 일본의 시각에서 고찰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Richard J. Samuels, “Rich Nation, Strong Army”: *National Security and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Tessa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Kenkichi Koizumi, “In Search of Wakon: The Cultural Dynamics of the Rise of Manufacturing Technology in Postwar Japan,” *Technology and Culture*, 43, (January, 2002), pp.29-49.

의 평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IT산업, R&D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다층위와 다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IT 중에서 2~3개의 층위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혹 제도와 규범에 대한 강조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경제와 산업 발상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다든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와 규범의 정비를 논하는 식의 접근이다.

둘째, 한·중·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IT협력 구상은 정부가 주도가 되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경제성장기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산업정책 담론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사실 여태까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정보화의 비전과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형 정보화’의 형태가 발견된다. 동아시아 3국이 모두 대체로 산업화시기에 채택되었던 제도적 대응의 패턴을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정보화의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접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산업화시대의 정책이 그러하였듯이 차세대의 비전으로 동아시아 IT협력의 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IT기본법의 시행이나 IT전략본부의 설치, 한국의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존재, 그리고 중국의 경우 1953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10.5계획이나 863계획 등은 바로 ‘강력한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국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IT협력의 목표를 정부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으로 드라이브하려는 발상인 것이다.

끝으로, 한·중·일의 동아시아 IT담론의 내용을 보면,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한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효율성 증진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현실주의적 또는 중상주의적인 입장에서 중심(center)이나 허브(hub)를 추구하는 담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아

시아 IT담론은 평면적 공간 활용을 염두에 둔 중심-주변의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발상은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3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IT클러스터에 대한 구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쓰쿠바 과학단지, 구마모토 폴리스에 이어 후쿠오카에 아일랜드시티를 건설하고 있으며, R&D 허브 개발을 통해 경기회복을 통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대덕연구단지과 인천 송도, 상암동 미디어 클러스터, 부산 센텀시티 등을 R&D 허브로 만드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의 중관춘, 상하이의 푸둥신구에 이어 광둥성 선전, 저장성 항저우, 쓰촨성 청두 등에서 R&D허브를 구축 중이다. 이들은 모두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지나는 문제점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클러스터의 구축이라기 보다는 경쟁을 위한 교두보의 구축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로섬게임의 사고를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⁴¹⁾

2.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의 모색

IT분야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동아시아형 산업모델이 정보화시대에도 여전히 유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각국 차원에서 IT분야의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 환경에 적합한 제도표준의 도출 문제와 관련되는데, 이 글에서 다룰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검토할 문제이다. 이 글의 주요 관심사는 국내 차원의 '제도조정(institutional adjustment)'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만약에 동아시아 3국이 이렇게 19세기 이래 계속되어 온 발전국가적인 지향을 고수할 경우 IT분야에서 지역차원에서의 협력은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41)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와 동북아공동체," pp.484-485

동아시아 대항담론의 현실화와 제도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진행된 동아시아 IT협력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IT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이나 지역표준 협력의 강조 등 다분히 국가중심적인 접근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IT협력의 문제를 놓고 개최된 국장급 IT전문가 회의나 IT장관회의 및 IT정상회의 등의 사례가 이를 잘 반영한다. 하물며 글로벌 차원에서는 자발적인 사용자·개발자 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등장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조차도 동아시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위로부터의 접근'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발전국가 마인드를 가지고 IT통상정책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기술표준의 조화, 상호인증협정의 추진, 정부조달시장의 상호 개방, IT통상정책의 공조협력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국가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협력에 일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객체화되고 닫힌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 구상을 상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한국의 동북아시아대론, 일본의 ABP계획 등과 같은 IT구상이 상정하는 공간은 모두 '닫힌 동아시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IT담론의 제시는 일단 일국 차원에서 국한되었던 공간의 발상이나 양자 관계와 같은 1차원적이고 관계적인 공간 발상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인정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국 차원을 넘어서 이웃나라들을 둘러보는 21세기의 새로운 공간구상의 발로라는 점에서 참신한 발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근접한 이웃나라인 한·중·일의 동아시아를 상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1세기 미래전략, 그것도 글로벌 차원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IT전략의 공간으로서 동아시아만의 인접공간을 설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IT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아마도 한·중·일 이외의 다른 동아시아,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

가 주체의 지위에서 배제되고 객체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남아 화교권의 역동성이나 중국·일본 등의 아시아구상에서 등장하는 동남아의 적극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동아시아를 협소한 틀 안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IT가 갖는 시공간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닫힌 공간 개념을 가지고 IT분야의 전략에 임한다면 동아시아 IT담론이 실현될 길은 요원하다. 여기에 각국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형 산업모델이 가지는 지역협력 차원의 딜레마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 IT를 매개로 하여 생성되는 공간은 전방위형(all-channel)을 지향하는 탈(脫) 허브형 네트워크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유비쿼터스 시대의 3차원(또는 4차원) 네트워크는 바로 이러한 탈 허브형 네트워크이며,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허브는 그 자체가 갖는 절대적인 의미보다는 주변의 다른 노드(node)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탈 허브형 네트워크 환경의 개념설정은 동아시아 IT협력과 여기에서 담당하는 한·중·일의 역할에도 적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 허브형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탈 허브형 네트워크에서는 결과적으로 노드 중심의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들 간의 다기능적 분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 때문이다.⁴²⁾

결국 동아시아 IT담론에 담겨야 할 내용은 자기중심적 발상에 기초해서 특정 국가만이 잘살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구성원 모두의 공존공영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하는 공유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중·일 IT협력이 역외 국가들을 차별하지 않는 안과 밖으로 열린 지역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IT협력은 물론, 아세안+3나 ASEM, APEC TEL, APT-ASTAP 등과 같은 기존의 지역기구 뿐만 아니라 ITU 등

42)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 지식/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 『세계정치』 26(1), (2005, 봄·여름), pp.93-120.

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복합적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공간 설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 급속히 주목의 대상으로서 떠오르는 미국·중국·인도 삼각협력의 공간이나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가 창출하는 공간 등도 그 사례들이다. 이러한 다층적 공간 속에서 동아시아 개념의 협소성을 넘어서 안과 밖의 입체적 공간을 활용하는 '개방된 집중 공간'으로서의 동아시아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IT분야 제도화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미래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각 행위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시아에서의 탈근대 지역단위체의 실험으로서의 지역주의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 역시 향후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시에 지구화에 대응하는 실험을 벌이고 있는 통합유럽(EU)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서 EU처럼 단시일 내에 초국적(supranational) 기구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통합이 반드시 EU와 같은 초국적 정치단위체의 수립을 지향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모델의 등장을 기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지역협력이나 통합과정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공식적 기구를 통한 정부 간 협력보다는 미국과 일본 기업 및 화교자본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중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협력이 더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한다.⁴³⁾ 이러한 점에서 볼 때 IT분야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 또는 '네트워크 아시아(Network Asia,

43)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ishi (eds.),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NA)'를 상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IT담론의 제도화를 둘러싼 모색은 정보화시대의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를 만드는 21세기 문명표준경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은 IT산업에서 발견되는 지식질서의 세 측면, 즉 관념, 권력, 제도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IT담론의 내용과 그 현실화 및 제도화의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파악한 동아시아 IT담론은 미국 주도의 지구화와 정보화에 대한 대항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재조명되는 동아시아 공간을 그러한 대항 전략의 배후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IT패권에 대한 대항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글로벌 IT산업의 지식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IT패권과 동아시아 IT산업에서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변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과제들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이 글은 동아시아 IT담론이 제도화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기존의 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IT협력의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 글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와 관련하여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국의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등장한 IT협력의 구상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교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이 글은 앞서 펼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동아시아 IT담론의 현실화 및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복합전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동아시아 IT담론에 혼재되어 있는 '협력 담론'과 '경쟁 담론'을 어떻게 엮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IT담론은 역외에의 대항을 전제로 한 역내의 협력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 담론, 즉 부국강병담론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IT담론이 현실화 및 제도화의 전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의 부강(富強)국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된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써 경제와 산업적 이슈의 일부로 IT를 이해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동아시아 IT협력의 전략은 우선적으로 기술·경제·산업 발상을 중심으로 설정된 IT의 상(像)을 다층위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IT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이해하는 지식국가(knowledge state)에 대한 종합적 발상이 필요하다.

둘째, 동아시아 IT담론에서 갈등하고 있는 글로벌 패권 활용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결집전략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을 동아시아 공간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대항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 IT담론은 동아시아의 행위자로 미국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미국 없는 동아시아의 구상은 결국 동아시아에서 지역패권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중국에 대한 견제의 방책을 너무 쉽게 제외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국의 주체적 활용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경우에 따라서 한국은 다른 비(非) 제국들의 제국 활용 전략과도 경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정보화시대 지식질서의 세력균형을 고민하는 '지지학(地知學)'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행위자를 선별하고 미국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동아시아 IT담론 내에서 명시적·암묵적으로 갈등하고 발전국가와 네트워크국가의 모델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여하튼 동아시아 IT담론이 실질적인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아시아형 발전국가 모델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부강국가 또는 발전국가의 모델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존공영의 네트워크만을 추구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비전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산업적 연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구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업체계/네트워크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노드(value node)'를 담당하는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굳이 명명하자면, '발전형 네트워크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s)⁴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미래를 고민하는 작업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의 시각이다. 기존의 국가간 관계를 탐구하는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 international politics)의 시각은 세계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렇다고 21세기 세계정치를 제국적 질서로 파악하는 '제국정치학(帝國政治學, imperial politics)⁴⁵⁾의 틀도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다. 결국 변화하는

44) 산업화시대의 소위 '관료적 발전국가(developmental bureaucratic state)' 모델을 넘어서는 정보화시대의 소위 '네트워크 발전국가(developmental network state)'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ean O'Riain, *The Politics of High-Tech Growth: Developmental Network States in the Glob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45) 김명섭,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위한 모색," 『세

세계정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치학과 제국정치학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네트워크 세계정치학' 또는 '망제정치학(網際政治學, internetwork politics)'의 시각이 필요하다.⁴⁶⁾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앞서 제기한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의 형체가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유념할 것은 동아시아형 네트워크국가에 대한 네트워크 세계정치학적 탐구가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의 논의가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 어떤 보편적 함의를 주는가의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정치연구』 1(1), (2001), pp.3-38.

46)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제국."